

2018년 객관식 소방기본법 정오표(6.30)

페이지(p)	오(수정 전)	정(수정 후)
p 37 89번 M	전기안전	화재안전
p 65 70번 G	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합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p 65 70번 G	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p 65 70번 해설 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시·도지사
p 115 41번 해설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p 129 86번 G 및 해설	3천만원	5천만원
p 163 56번 A	화재조사로	화재로
p 182 47번 해설	③ 1.2.3.4. 부분	1. 소방안전교육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 소방 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소방안전교육 전문가 3. 소방안전교육 수료자 4. 소방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 182 48번 해설	교육실시 결과 및 개선	교육결과 분석 및 개선
p 190 1번 해설	총회 또는 이사회	이사회
p 192 7번 해설	3천만원	5천만원
p 192 7번 정답	B	A
p 192 8번 M 및 해설	3천만원	5천만원
p 192 9번 문제	3천만원	5천만원
p 192 9번 해설	1천 500만원	3천만원
p 193 10번 M 및 해설	3천만원	5천만원
p 193 12번 문제 및 해설	1천 500만원	3천만원
p 193 12번 해설	3000만원	5천만원
p 195 18번 해설	1,500만원	3천만원
p 196 19번 해설	3천만원	5천만원
p 196 19번 정답	B	A
p 202 37번 해설	3000만원	5천만원
p 205 48번 문제 및 해설	3천만원	5천만원
p 205 48번 해설	1천 500만원	3천만원
p 207 48번 해설 보완		보상금은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 금을 지급한다.
p 208 56번 M	소방방재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소방기본법[시행 2018.8.10.] [법률 제15365호, 2018.2.9.,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현행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주차로 인하여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현장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기본법[시행 2018.6.27.] [법률 제15532호, 2018.3.27.,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현행법 제25조제3항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한 견인차량과 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며,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 등을 지원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의 공익성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의 처벌 정도가 징역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벌금 '3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30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1조 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 2018.6.27.] [대통령령 제128995호, 2018.6.26.,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고,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정하고,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지급절차·방법을 정하고,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①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제2조의2 신설) :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화재경계지구 및 시·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정함.
- ②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9조 신설) :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③ 손실보상 관련 규정 신설(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 신설, 제15조 및 제16조)
 - ㉠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및 사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하고,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함.
 -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소방기본법시행규칙[시행 2018.6.27.] [행정안전부령 제62호, 2018.6.26.,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을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관창(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 2. 소방호스 및 관창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3. 비상소화장치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